

전남 농작물 병해 확산에 ‘애타는 농심’

올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1만3337ha…전국 36% 차지
쪽파·마늘 등 밭작물도 노균병·잿빛곰팡이병 동시 확산
정부,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재난지원금 지급

“벼 이삭마다 검은 반점이 생기더니 알이 차질 않았어요. 비만 멈췄으면 심드라구요.” 전남 신안군 안좌면 산두리에서 10ha (3만평)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이민석씨 (43)는 올해 수확기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이씨가 수확한 벼는 깨씨무늬병 피해로 200평당 생산량이 지난해 440kg에서 올해 350kg으로 줄었다. 그는 “병해 피해가 이렇게 심한 적은 처음”이라며 “벼알이 겉게 변해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전남 곳곳에서 농작물 병해 피해가 속출하

고 있다. 특히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벼 깨씨무늬병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수확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남 깨씨무늬병 발병 면적은 1만3337ha로 전년 대비 3.7배, 평년 대비 2.1배 증가했다. 전국 발병 면적 3만6320ha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전남에 피해가 집중됐다. 깨씨무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균이 이삭에 침투해 벼알이 겉게 변하고 낱알이 쭈그러드는 병해로, 수확량은 최대 30% 줄고 품질

은 급격히 떨어진다. 전남은 해양성 기후 특성상 습도가 높고 일조량이 적어 병해에 특히 취약한 지역이다. 지난 9월 하순부터 10월 초중순까지 전남의 강우일수는 평년보다 많고 일조량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 같은 기후영향으로 깨씨무늬병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병해 피해는 벼 뿐만이 아니다. 보성·고흥 등 남해안권에서는 쪽파·마늘 등 밭작물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보성군에서는 쪽파 재배지 120ha에서 노균병과 잿빛곰팡이병, 잎끝마름병이 동시에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마늘·양파밭에서도 유사 증상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기후변화로 병해·재해가 일상화되는 만큼, 연중 가입이 가능한 상시형 농업재해보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농작물 병해 확산 방지와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즉각적으로 착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깨씨무늬병 피해 벼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전량 매입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남이 전체 피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매년 불가항력적인 기상재해로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남도의 강력한 요청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올해 이삭고온으로 확산된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하고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송미령 장관은 “피해조사 절차를 거쳐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피해 벼에 대한 정부 매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농업정책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을 시행하고, 추가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정부의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과 관련 “수확기에 시름으로 몰들었던 농민의 절실한 요구가 신속히 받아들여진 이번 결정에 대해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국화꽃 향기 가득한 가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14일 광주 북구 각화동 화훼단지에서 찾은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국화꽃을 살펴 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 국립의대 설립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

이개호 의원, 예타·입지 선정·예산 확보 병행 추진
2027년 개교도 가능…국감서 전남의료 현실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14일 보건복지부를 향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 단계를 넘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남은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이 51.2%로 전국 평균 (19.9%)의 2.5배에 달하고, 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은 55.0%에 불과하다”며 “특히 공중보건조사 수는 불과 5년 만에 637명에서 477명으로 급감,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



협 지역이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이내 이용률도 53.8%로 전국 평균 (72.2%)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의대 부재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이 전남 의료시스템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어 복지부가 결단만 내리면 오는 2027년 개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대 신설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도입해 예비타당성 조사, 입

지 선정, 예산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설립 시점을 2030년으로 연급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 실무협의 결과 3~5년이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2027년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질의를 받고 “교육부의 로드맵은 인가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일 것”이라며 “교육 병원 확보와 정원 문제 등 복지부 소관 사항을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분산배치 검토를”
서왕진 의원, 전력·용수 인프라 따져 ‘입지 재검토’ 촉구

서왕진 의원 (조곡혁신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이 “글로벌 첨단기업들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을 입지 지역으로 검토하는 추세다. 수도권 집중 조성보다 전력·용수 인프라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며 “반

도체·AI 분야 첨단기업을 호남 등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산업통상부에 촉구했다. 지난 13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산업부가 국토부에 제출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 의견서’를 근거로 “의견서 어디에도 전력이나 용수 확보에 관한 사전 검토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면 이러한 검토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부족한 전력을 매우기 위해 LNG 발전소 3기를 신설하고, 호남에서 용인까지 345kV 송전선 14개를 새로 짓는

3.7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막대한 비용뿐 아니라 지역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기 안성·이천·여주 등 클러스터 인근 지자체들의 반발과 송전선로 건설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 청양과 전북 곳곳에서도 최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송전선로와 개폐소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컨설팅·설치·인허가·리파워링·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 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40-8374 / 010-4572-7164